

첨단 과학기법 총동원 조사...벽면·나무에 생생한 흔적

41년간 옛 전남도청에 박혀있던 탄두·탄흔 어떻게 찾았나

2015년 원형복원 요구 때 총탄 조사 의뢰...국과수·문체부 “불가능” 답변
탄흔 535개 중 절반이 경찰국 외벽 1층...계엄군 도청 후문에서 진입 반증
6년만의 조사서 탄흔·탄두 대거 발견...5·18 진상조사 적극적 자세 필요

옛 전남도청 건물에서 발견된 총탄 <2020년 12월 29일 광주일보 6면>은 41년 전 계엄군의 시민들을 향한 잔혹한 진압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5월 단체들의 옛 전남도청 총탄 흔적에 대한 조사 요청을 “총탄 흔적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일축했던 국과수와 문체부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41년 전 중요한 역사적 자료를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던 당시 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숨겨진 탄흔, 어떻게 찾았나=13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첨단 과학 기법을 동원, 41년 동안 숨겨졌던 옛 전남도청 탄흔을 찾아냈다.

복원단은 옛 전남도청 본관·회의실·별관, 경찰국 본관·민원실, 상무관 등 6개 동에 대해 ‘적외선 열화상’, ‘방사선 투과’, ‘3차원(3D) 흔적 지도 작성’, ‘철근 탐사기’를 통한 외벽 흔적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해 깊이 박혀있는 총탄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벽체의 밀도와 깊이별로 투과율이 다른 ‘이리듬’, ‘코발트’, ‘셀레늄’ 등의 방사선을 쓰는 ‘감마선’ 투과 조사 방식이 도움이 됐다는 게 복원단 설명이다.

당시 상황과 유사한 실험도 총탄 발견에 도움이 됐다. 복원단은 지난 1980년 당시 만들어진 도청 외벽과 비슷한 벽면을 직접 만든 뒤 군 부대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벽면 사격을 실시해 탄흔 샘플을 확보해 비교 분석해 탄흔들을 찾아냈다.

◇찾아낸 탄흔, 어떤 의미인가=41년 만에 발견된 총탄(탄두)과 탄흔은 1980년 5월 시민들을 향한 잔혹한 유혈 진압을 유추할 수 있다.

무수하게 많은 수백발의 탄흔이 시민들의 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에서 발견된 만큼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사격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국과수는 이번에 발견된 탄두에서는 계엄군이 사용한 M-16소총의 강선폭인 2.9mm의 압흔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발표된 탄두 10개 중 8개는 당시 시민군 상황실로 이용되던 서무과에서 문 수상단과 서무과 창문 인근에서 발견 됐고, 2발은 경찰국 본관 외벽에서 발견됐다. 당시 작성된 ‘전투상보’에는 새벽 5시15분까지 3공수여단 부대원들은 도청 각 방에 수류탄이나 삼관탄, 가스탄을 넣은 뒤 소총을 난사하는 방식으로 시민군을 제압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서무과 입구 우측 상단에서 발견된 탄두들은 전남도청 2층에서 1층에 있는 시민군 상황실에 자동 사격으로 난사를 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복원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이날 복원단이 탄흔으로 의심된다고 발표한 535개의 탄흔 중 절반가량인 268개가 경찰국 외벽 1층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계엄군들이 진입 과정에서 도청 후문 경찰국 외벽 후면을 향한 엄호사격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육군본부 작성한 ‘특전사 전투상보’에 따르면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10분 도청 후문 담(높이 2.5m)을 넘는 특공조는 3중대·2중대·1중대·특공



13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본관 1층에서 탄흔 조사를 맡은 한국전문대학교 관계자가 탄두가 발견된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 위는 조사 과정에서 발굴한 탄두의 모습.

중대·4중대·11중대 순으로 도청 내부에 진입했다.

당시 기록엔 계엄군에 의해 숨진 시민군은 4명이고 포로는 200여명에 달했고, ‘분석 및 교훈’에서 3공수여단은 ‘평소 연마한 전술(침투 기술, 사격술) 유감없이 발휘’라고 적혀있다.

◇일찍 찾을 수 없었나=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의 무책임한 자세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문체부는 지

난 2015년 5월 단체들의 총탄 흔적 조사 요구에 “옛 전남도청 외벽 마감재가 제거되어야 조사를 할 수 있고 비파괴 검사의 경우 강한 방사능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거론됐던 방법들이 이번 조사에 활용됐다는 점에서 진실 찾기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김희승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당시 전남도청에서 계엄군들의 사격이 있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던, 이제와 탄흔과 탄두를 발견 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무심하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이라면서 “5·18 당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두환 5월 광주에...항소심 첫 공판기일

인정신문 절차 출석 가능성

41년 전, 5월 광주를 종횡로 짓밟은 주범으로 꼽히는 전두환(90)씨가 오는 5월 광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 때문으로,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는 5월 광주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오는 5월 10일 오전 10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전씨의 출석 여부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출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277조 3호)은 ‘피고인은 인

정신문을 진행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신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본적), 주거, 직업을 물어서 출석한 자가 피고인임에 틀림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재판부가 바뀌면 인정신문을 해야 한다.

이같은 일정에 따라 재판 출석 의무가 생긴 것으로, 5월 단체들의 움직임도 한층 분주해질 전망이다.

전씨는 2017년 폐년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현복 광양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경찰, 광양시청 압수수색 등 수사 ‘속도’

채용비리·산지관리법 위반 별도 조사

정현복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경찰이 광양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정 시장과 자녀가 소유한 땅에 도로가 개설하고 부인 소유의 땅에 개발을 진행한 의혹과 관련, 이날 수사관 17명을 보내 정 시장 집무실과 광양시청 도로과, 정 시장 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도로 개발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컴퓨터에 담긴 자료도 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도시계획 정비안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이 보유한 광양읍 칠성리 호복마을 토지를 178m 길이 2차선 도로 공사 구간에 포함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 시장 부인이 2년 전 매실 농사를 짓겠다고 사들인 진월면 신구리 인근 부지가 군도 6호선 공사 구간에 포함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부동산 투기 외에 추가로 고발된 채용 비리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정 시장이 부정채용과 문종묘 일대 주차장 불법 조성 등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광산업진흥회·군산시청 납품비리 의혹 관련 압수수색

광주지검이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 한국광산업진흥회와 군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13일 광주지검, 한국광산업진흥회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12일 광주시 북구 첨단지구에 위치한 한국광산업진흥회와 군산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광산업진흥회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9억6000만원 규모의 ‘군산시 가로등 개선 및 조명시설물 임대관리 용역’과 관련, 조달 입찰 및 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군산시에서 위탁받아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입찰 과정에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 간 브로커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광산업진흥회 관계자는 “공정한 입찰 심사를 위해 외부 인력 풀을 활용하고 있으며 심사 과정도 녹음·녹화해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